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 기초 확립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 역시 문제 중심의 사후적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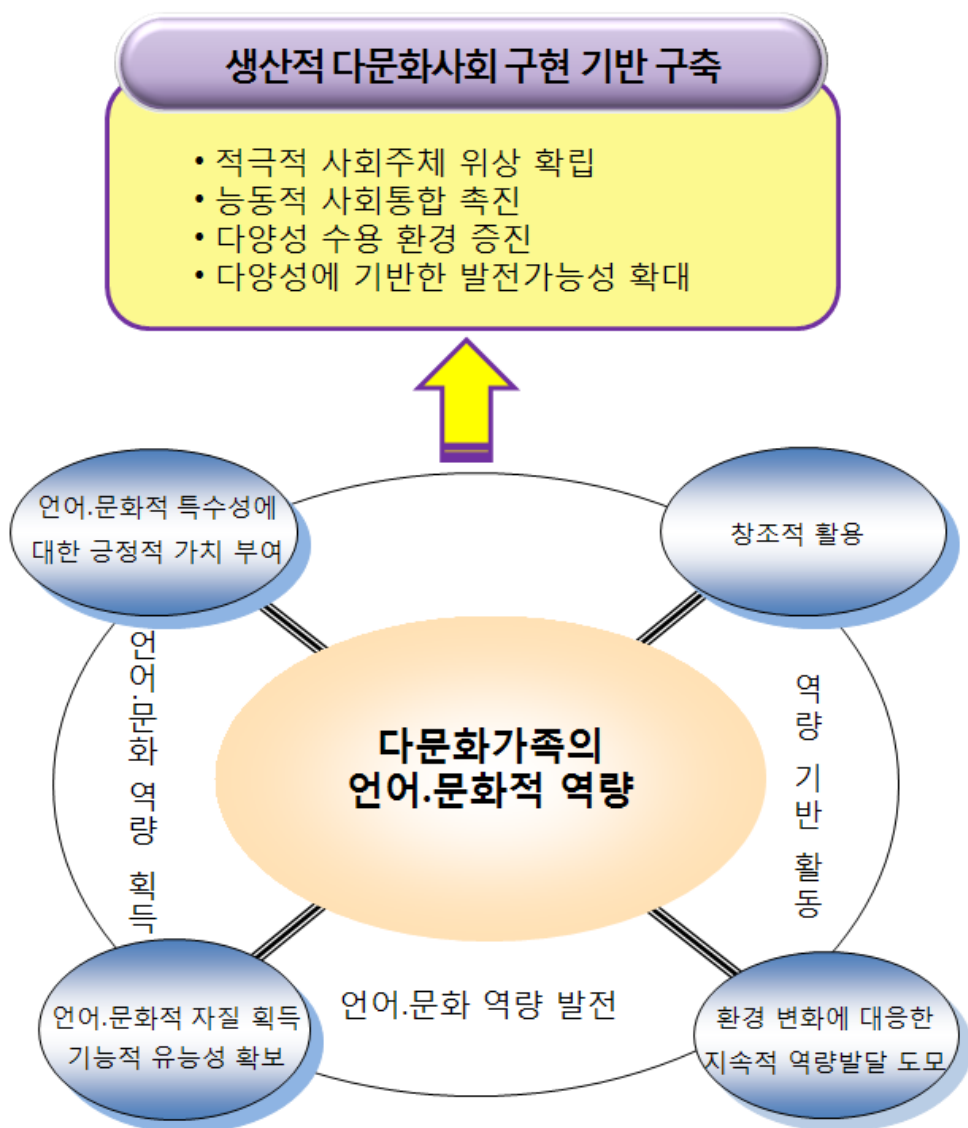
-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은 이주민 개인이나 이주민 공동체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화 등의 부정적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음. 특히,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로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문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특수성을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자녀의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언어·문화적 자질을 활용한 직업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다소 전향적인 접근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지극히 주변적인 개별 단위사업 차원에 불과할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주요 이민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과 유사하게 지극히 제한적 차원에서만 이민을 개방하고 있는 일본 등지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부정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역량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기본적 정책 방향



<그림>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과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구현

□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한국사회로의 동화만을 지향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함.
- 두 법 모두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또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투명하며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수사를 벗어나기는 힘들.
-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재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언어·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취업 지원 등도 정책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인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고 이주민의 정착에 대한 제도적 틀이 보다 유연하게 전환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주민과 그 가족 전반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다른 별도의 법률, 가칭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만함.

□ 정책의 다문화지향성 점검

-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들의 특수성을 결핍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핍론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직접 관련된 법률, 정책계획의 다문화지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관련 법률과 정책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어떠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들의 특수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체계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의 다문화지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문화지향성 점검대상 정책은 일차적으로는 관련 법률과 정책계획에서 출발하여 일선 서비스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3. 정책효과

- ☐ 적극적 사회주체로서 다문화가족의 위상 정립
- ☐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사회의 전개를 수용하는 사회 전반적 환경 조성
- ☐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 가능성 확대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